

냉방비 ‘폭탄’...“전기료 카드 납부 확대·분납 등 대책을”

장기화된 폭염으로 소상공인들의 냉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남광주지역의 전통시장과 음식점, 카페 등 골목상권 역시 폭염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냉방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연합회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유동인구가 감소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지만, 영업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어 냉방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금리·고불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전기요금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전기요금 카드 납부 대상 확대와 분납제도 개선이다. 현재 한전 규정상 계약전력 20kW를 초과

하는 고객은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연합회는 해당 기준이 2014년 정해진 것으로 기후변화와 냉방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당과 카페, PC방, 편의점 등 상점수 소상공인이 20kW를 초과하는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

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연합회는 요구했다.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확대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전이 냉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구매가격의 4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 한도가 소진되면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며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 역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이 반복되는 만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요금은 이제 단순한 유지비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필수 비용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장기 폭염으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7월 금융권 가계대출 6.2조 ↑ ‘빚투’ 진정 등에 증가폭 축소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다소 둔화했다. 중시 조정에 ‘빚투’가 잦아든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증가 폭이 나란히 줄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94조 8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6월 7조6000억원 급증해 2024년 8월(9조2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난 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48조4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증가했다. 6월의 4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기타대출 잔액도 245조4000억원으로 2조원 늘어 역시 6월(3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6월(8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 전월(4조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권(+4조3000억→+3조4000억)과 제2금융권(+3000억→+1000억) 모두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도 2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2조원으로 전월(+2조6000억원)보다 축소된 점이 주요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전력거래소는 최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3개 기관과 재난안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력거래소, 전력산업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국가재난안전교육원·광주대 등과 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광주대학교와 손잡고 국가핵심기반인 전력산업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3개 기관과 재난안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재난안전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교육 인프라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교육·연구·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

장과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 정중제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재난안전 분야 공동 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공유·운영, 교수·전문가·실무자 간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학술대회·워크숍 공동 개최, 재난안전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교재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국가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산업과 국가핵심기반 분야의 재난관리와 관련한 공동 연구와 기술교

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대응훈련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에도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관 간 재난안전 관련 정보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해 교육과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안전 분야 교육·연구기관 및 학계와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핵심기반인 전력산업의 재난대응 역량과 안전문화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특별시 출범 첫 농수산물식품 수출상담회

31일까지 생산·가공 80개사 모집...10월 14일 여수서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0월 14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릴 ‘2026년 하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발굴부터 해외 바이어 매칭, 1대1 비즈니스 상담,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전남광주지역 농수산물식품 생산·가공 및 수출기업이다. 8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참가신청서와 국문·영문 제품 소개서(브로슈어) 등을 갖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e음(www.je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가 30명 공개 채용

28일까지 접수...최종 합격자 11일 임용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도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모집’ 원서 접수를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운용전략, 주식, 채권,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자금관리, 기금정보 등 기금운용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선발 인원은 직급별로 책임운용역 3명, 전임운용역 27명 등 총 30명 규모다. 근무지는 국민연금공단(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입사 시 3~5년간 계약하며 업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급여 수준은 공단 내부 방침에 따른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경력검증, 면접 등 기금운용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선발된 최종 합격자를 순으로 진행한다.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오는 2026년 11월 임용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enzy@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 📍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 💰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